

“김명수, 사법농단 해결의지 말 뿐인가” 與野 질타

대법원 국감

양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영장 기각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 누락 등 지적

사법부가 ‘사법농단’ 대처 미흡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눈먼 돈 의혹’으로 10일 여야의 뜻매를 맞았다.

국회는 이날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김 대법원장의 충전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 누락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충석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90%가 넘는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률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이 사법부를 뭐라 부르는지 아는가. 아이들 그룹 이름을 따서 ‘방탄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단’이라고 부른다”며 “검사 동일체 원칙은 들었는데 그보다 선 판사동일체 원칙은 처음 듣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련자들이 증거를 없앤 가능성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기각을 주고 받으며 ‘쇼’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수사는 검사가 해 칼자루를 주지만, 법리 적용은 법원으로 넘어가 ‘판

사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무죄 판단을 내린 점도 사법농단의 직권남용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질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김 대법원장이 춘전지법원장 시절인 2015년~2017년 공보관실 운영비 13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사용 증빙 자료가 없다는 점을 국감 내내 문제삼았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날 법원행정처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각급 법원장 57명이 같은 기간 증빙 자료 없이 현금으로 받아간 공보운영비가 7억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쌈짓돈 예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김 대법원장이 적폐 청산을 할 자격이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안철상 총장은 “공적자금을 법원을 위해 수령했다면 누가 받든 문제되지 않는다”며 “현금 수령은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서 2018년에는 카드로 쓰기로 했고, 그것도 부적당하다고 여겨 2019년에는 해제했다. 나머지 3분의 2는 불용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에 열렸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져, 질의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진행됐다. 야당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있는 만큼, 대법원장 본인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국감 대상 기관장은 법원행정처장이며,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 질의는 전례가 없다고 맞서 야당 의원들이 줄줄이 국감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정보공개청구 느는데 공개율은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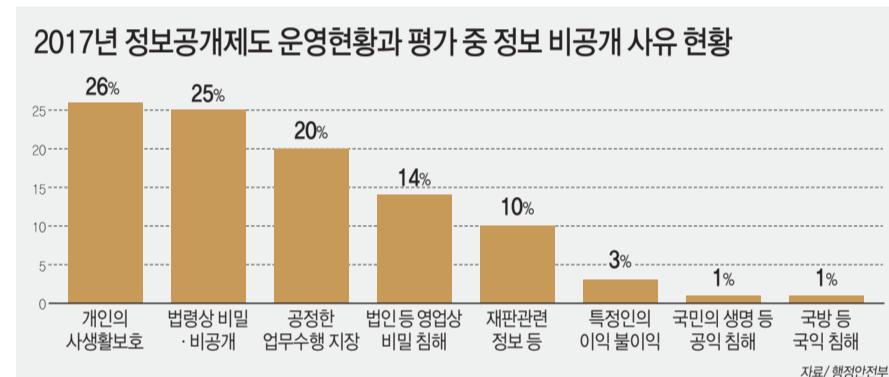
청구건수 85.5만건 13% 증가
공개율 0.1%p 줄어든 95.5%

#. A씨는 지난해 정부에 ‘특정 기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목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 혹은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 공개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단지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누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 B 씨는 경찰청에 ‘교통사고 조사 매뉴얼’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내부적으로 제작된 책자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범죄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자료를 비공개 처리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시민과 이해 당사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데 반해 정보공개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85만5021건을 기록했다. 전년인 2016년과 비교해 13% 증가했다. 정보공개법이 처음 시행된 1998년



과 비교해 32배나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2017년 정보공개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줄어든 95.5%를 나타냈다. 정보공개율은 2015년 96.1%에서 2016년 95.6%, 2017년 95.5%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접수된 정보공개 신청 85만여 건 중 청구인이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처리된 경우를 제외한 실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는 건수는 56만3597건이다. 이 중 84%인 47만7870건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부공개’ 됐고, 11%(6만596건)는 ‘부분공개’ 됐다. 나머지 4%(2만5131건)는 ‘비공개’ 처리됐다.

비공개 사유로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가 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

보’(25%),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20%) 순이었다.

정부의 정보공개율이 줄어드는 데 따른 시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9월 발간한 ‘2017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신청은 총 6689건으로 2016년 5290건과 비교해 26.4% 증가했다.

불복구제 신청이라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부의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 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뜻한다.

행안부는 “2017년 정보공개 청구 건수 증가율이 13%임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시민 불만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경 기자 hjk1@

육사-ROTC 장교 양성비 10배차

육사 1인당 2.3억, ROTC 1764만원
“단순비교 안돼… 세부적 차이 따져야”

육군사관학교와 ROTC(학군장교)의 장교양성비가 10배 이상 차이나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육군 학사장교를 비롯한 군내 소수파들은 “차별과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치적 틀에 갖춰 육사를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육사출신 장교 양성비용 1인당 2억

3430만원, ROTC(학군)는 1764만원

되기 위한 실질적 분야를 세부적으로 따져 차이가 있다면 개선 해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지 않고 단순히 사관학교 양성비용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군내 갈등만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 학사장교 등 기타 사관후보생들 차별은 외면하나

또 다른 학사장교 출신 현역장교은 “3년을 의무복무하는 소수파 사관후보생들은 민간에서 다양한 자격을 보유하고 군에 입대했지만, 학군장교들처럼 장려금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학군사관후보생들이 입영기간 받는 훈련비는 65만 3500원이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입대한 학사사관후보생들은 44만2000원(2017년 기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열린 지상군페스티벌에서는 학군사관후보생 흥보부스는 있어도, 학사 등 소수파 사관후보생과정은 소개 되지도 않았다. 정부가 ‘육사견제’를 위해 학군장교를 이용하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학사장교 등 소수파 장교들은 학군장교들 보다 더 열악한 입장에 놓여 있다. 급여와 근속년수 산정에도 이들은 차별을 받는다.

육사출신 소위는 4호봉, 3사와 학군출신은 2호봉을 급여에 반영한다. 15년 근속 근무약정도 육사는 임관 11년 후, 3사와 학군은 임관 13년 후 수여받지만, 학사장교 등 소수파 장교들은 임관 15년 후에 15년 근속근무장을 수여받는다.

의명의 육사 출신 장교는 “특정 출신이 기득권을 쥐는 것은 분명 적폐”라면서도 “정부는 일선 장교들이 복무간 봄으로 느끼는 차별은 외면하면서 비율맞추기식 장군진급으로 적폐를 해결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주 52시간제 시행 후 4곳 중 1곳 “인력충원 계획”

3557곳 중 937곳 4.3만명 규모
‘유연근로제 도입’ 29%로 늘어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인력 충원 목표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 3~17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3557곳 가운데 937곳(26.3%)이 인력 충원 계획을 추진 중이었고 그 규모는 모두 합해 4만 3172명으로 집계됐다.

여만에 한 것으로, 사업장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인 지난 5월 25일~6월 19일에도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당시 조사 대상 사업장은 3627곳이었고 이 가운데 813곳(22.4%)에서 2만 1115명의 인력 충원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전후로 약 2개월 만에 인력 충원을 계획 중인 사업장이 100곳 이상 증가했고 충원 계획 규모도 약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사업장의 인력 충원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동부의 1~2차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학사장교 626기(470명) 단기간부사관 38기(17명)가 2017년 6월 23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임관식을 거행했다.